



보도 일시	2022. 12. 06.(화) 09:30	배포 일시	2022. 12. 06.(화) 08:3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집행특별점검단 집행전략과	책임자	과장 문상호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 이해인 (haein85@korea.kr)

최상대 차관, 「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」 주재

- 내년도 예산, 민생안정을 위해 조속한 국회 심의·확정 필요
- 새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12월 중 사전 집행준비 완료

-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6일(화) 08:30, 한국수출입은행에서 「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」를 주재하여,
 - 국회에서 논의 중인 ① '23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② '22년 4/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·불용 전망, ③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·계획 등을 검토하였음
-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초 어려운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·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,
 - '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, 12월 중 부처별·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사전절차를 서둘러 '23년 1월 2일(회계연도 개시)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하였음

<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요 >

- ▶ 일 시 : 2022. 12. 06.(화) 08:30
- ▶ 장 소 : 한국수출입은행
- ▶ 참석자 :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(주재),
행안부·교육부·복지부·농림부·산업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등
- ▶ 안 건 : ① '23년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계획(관계부처 합동)
② '22.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·불용전망(관계부처 합동)
③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(관계부처 합동)

※ (별첨)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발언

【 최근 경제상황 및 전망 】

□ 금년도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“복합 경제위기”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음

- 다행히 최근 물가는 원자재 가격 안정화 흐름, 정부의 정책 노력 등이 결부되어 상승세가 크게 둔화*되었지만,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민생경제에 부담

*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('22.1)3.6 (3)4.1 (5)5.4 (7)6.3 (9)5.6 (10)5.7 (11)5.0

- 그간 경기회복을 견인해 온 소비의 추가상승 제약*으로 인해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조짐 속에서,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은 한층 고조

* 소매 판매(전월비, %): ('22.1/4)△1.1 (2/4)△1.1 (3/4)1.2 (10월)△0.2

□ 안타깝게도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음

-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*되는 가운데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임

* '22→'23년 성장 전망(%OECD) : (세계) 3.1→2.2 (美) 1.8→0.5 (韓) 2.7→1.8

□ 오늘 회의에서는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서민·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

- 얼마남지 않은 연말까지의 민생안정 사업 등의 재정집행 계획과 '23년 예산의 집행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임

1

내년도 민생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·의결 요청

-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「상반기 신속집행 기조」 하에서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 관리할 계획
 -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*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하여 설정·관리하는 한편,
 - * 연도별 상반기 집행목표(%) : ('18) 58 ('19) 61 ('20) 62 ('21) 63 ('22) 63
 -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
-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·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·공고 등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
 -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·민생·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·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

2

12월 중 '23년 예산 집행준비 완료

- 정부는 '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·의결되는 즉시, 사업계획의 확정·공고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
 - '23년 서민·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- 먼저, '23년 1월 2일,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

- 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 집행 전달체계를 점검·준비
- ② 부처별·사업별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·확정하고,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진행
- ③ 또한,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연도 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까지 완료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개시

□ 한편, 예년에 비해 이른 설명절 연휴(23.1.21~24일)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임

- 내년에도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행을 중점 점검·관리해나갈 계획이나,
- 이러한 재정사업이 제때 집행되어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준비와 연초 집행 개시가 필요

3 민생안정 사업 등 집행점검

□ 그간 마련한* 물가·민생안정 사업들의 집행을 점검한 결과, 당초 계획에 따라 적기 집행 중(연말까지 전액 집행 전망)

* 추경(5.29), 민생안정대책(5.30), 물가안정대책(6.19), 고물가 부담경감방안(7.8), 금융부분 민생안정(7.14), 추석 민생안정대책(8.11) 등

- 물가안정에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물가안정 사업*(44개, 5.3조원)은 11월말 기준 80.6%를 집행(연말까지 전액 집행 전망)

*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1.2조원, 주요 품목 수급가격안정지원 3.6조원, 식량안보 0.5조원

- 고물가 부담경감방안(7.8일 발표) 중 예산 이·전용 등 집행관리가 필요한 민생안정 사업(24개, 19.3조원)은 11월말 기준 92.3% 집행

- 최근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
 - 금년 민생대책을 통해 지원대상 및 단가가 확대*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·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
- * 지원대상 117.6만 가구(당초 예산 대비 +29.8만), 지원단가 평균 18.5만원(+5.8만원)

【 마무리 발언 】

-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간, 중앙-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국회의 협조가 필수
 - 각 부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금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내년 초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집행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람
 - 특히, 대부분의 복지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,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의 집행방향과 대상·시기 등을 충분히 소통·협의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
 - 예산안 심의·의결의 법정기한(12.2일)이 지나며,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, 국회에서도 '23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